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충남의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박 종 찬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1. 서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영역이 넓어지고 이와 함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지방 자치단체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체성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 시행할 수 있는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지역개발 및 행정서비스의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정책의 시행과 고도화된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업의 구조가 농림어업 중심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충남은 재원조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자금의 조달과 지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새로 출범한 지방 자치단체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국가의 총량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개발 정책으로 충남은 그 동안 지역단위의 성장보다는 국가전체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하위계획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토지, 인력 및 용수 등 기업 입지조건을 우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경제개발 과정

에서 소외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전국의 15개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지방경쟁력 순위에서 14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sup>1)</sup>

그러나 중앙통제의 경제개발은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해 수도권 등의 개발 우선지역에서 공장의 용지난, 인구과밀 및 공해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물류비용의 상승, 공장용지난 및 인력난 등 수도권과 국토의 동남권에서의 개발 부작용과 함께 최근에는 지방화 시대의 도래, 서해안 개발사업의 본격화 및 중국의 개방화에 따라 충남은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에 가깝다는 입지적인 면에서의 우위를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으로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전 및 투자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 지방생산자본의<sup>2)</sup> 축적으로 지역생산력이 증대되고, 지역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는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개발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생산자본을 그 근간으로 하는 지방기업이 활성화되어 지방기업의 재투자자와 지방금융의 환류가 지역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만 한다.

지방생산자본은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 즉 지방기업의 재투자자와 지방금융으로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지방기업이 지역자본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고용 및 소득 창출효과, 지방재정 확충효과, 그리고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들고 있다.<sup>3)</sup>

그러나 대기업의 현지 공장형 지방기업은 지방 생산자본 형성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원인은 설비투자, 원자재구매, 생산지원 서비스구매 등과 같은 의사결정의 권한이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본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부터 우리는 최근 충남의 서북부 해안에 조성되고 있는 석유화학 등 임해형 공단과 천안, 온양 등 북부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이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생각보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생산자본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투자재원의 형성도 지방금융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에 의해 충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금융은 서울지역이 예금부문에서 전국의 52.8%, 대출부문에서는 51.0%를 점유하고 있어 금융부문에서의 자금조달과 운영이 서울 및 수도권에

1) 정진호, KFS 추출법에 의한 1994년 지방경쟁력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1995.6.

2) 지방생산자본(허재완, 지역자본의 형성과 개발자원 확보,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제5권 제1호, 1993. 6, p.117)이란 공장 건물, 공장의 기계 및 도구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유형의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지역의 생산력이 증대되고 지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므로 지역개발의 핵심을 이룬다.

3) 국토개발연구원, 산업기지 개발의 지역 파급효과 분석, 1989.12.

편중되어 있다.<sup>4)</sup> 따라서 지방금융이 전국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역경제의 가용자금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충남의 지방금융자금 역외유출현황은 근년에 들어 예금은행의 경우 많이 개선되었으나 비통화 금융기관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92-94년 중 예금은행 대출금 가운데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이 28.6%인 반면 제조업에 대한 대출금은 17.5% 증가에 그쳐 제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 분야의 가용자금은 여전히 취약한 형편이다.<sup>5)</sup>

그러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생산자본 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충남은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되고, 또한 기존의 제조업 가운데 업종별 구성을 저부가가치의 경공업 중심구조를 탈피해 전기, 전자, 기계 및 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개방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충남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충남의 공업화 과정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자치시대 충청남도의 주요한 경제정책중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충남경제의 현황 및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평가하고, 제3장에서는 충남의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 및 실태를 분석해 산업구조의 변화 상황과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거래 비용의 감소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분업 체제의 경제적 동기와 사회분업 체제를 설명하고, 충남 중소기업의 하청거래 유형, 도급거래단계, 거래 모기업수 및 규모별 구성, 수급기업의 제품형태, 거래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급거래상의 애로점 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종합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충남의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와 충남 중소기업과 충남 진출 대기업 간의 협력관계 강화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2. 충남의 경제현황 및 산업구조

충남의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기준)은 93년도에 10조 2,750억원으로 92년도에 비해 13.5%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3.8%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성비 4.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무적인 현상은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액이 전국 인구대비 구성비 측면에서는 그 비율이 아직도 뒤쳐지지만 그 격차가 매년 줄어 들

4)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1991.

5) 한국은행 대전지점, 금리자유화 이후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구조변화, 1995.6.

고 있다는 점이다. <표1>에 나타난 것처럼 90년도에 1.1%의 차이가 매년 줄어 들어 93년도에는 0.5%로 줄어 들었다.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93년에 13.5%로 전국 평균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는 91년 부터 매년 전국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남의 경제성장율이 국토의 타 지역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한 지역내 총생산성장율은 충북의 15.0%, 광주 14%에 뒤이어 서울과 함께 13.5%의 증가율을 기록해 상당히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93년도 1인당 생산수준(경상가격 기준)은 5,392천원(6,718달러)으로 92년에 비해 15.2%

증가하여 전국평균을 100으로 본 충남의 1인당 생산수준지수는 88.8%로 92년도에 비해 41%포인트 향상되었다. 따라서 90년에 전국평균 1인당 생산액의 75.4%에 불과하던 충남의 1인당생산액은 그 격차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다.

'93년도의 성장내용을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음식료품과 화학제품의 성장률이 높았던 반면 섬유 및 의복제품은 부진하였으나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9.7%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또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건축이 활발하였던 건축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15.2%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업연초 및 인삼재

<표1> 충남 지역내총생산 규모 및 변화추이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총인구(천명)	1,988.8	1,961.8	1,933.9	1,905.5
전국대비구성비(%)	4.6	4.5	4.4	4.3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십억원)	6,206.3	7,653.9	9,051.7	10,275.0
전국대비구성비(%)	3.5	3.5	3.7	3.8
지역내총생산증가율(%)	21.4	23.3	18.3	13.5
	(2.9)	(7.6)	(10.3)	(8.3)
전국평균총생산증가율(%)	22.4	21.9	11.4	10.9
* ( )안의 수치는 90년 불변가격기준임	(11.4)	(9.6)	(5.7)	(6.3)
지역내총생산디플레이터	100.0	114.7	123.0	129.0
전국평균디플레이터	100.0	111.5	117.5	122.5
충남1인당생산수준(천원)	3,120.6	3,901.6	4,680.4	5,392.3
전국평균1인당생산수준(천원)	4,141.4	5,003.6	5,524.3	6,072.2
생산수준지수(충남/전국,%)	75.4	78.0	84.7	88.8

주 : 전국 부분은 국방부문 및 수입세가 제외된 수치임.

총생산은 경상가격 기준임.

자료: 통계청, 1993년 지역내총생산, 1995. 8.

배가 호황을 보인 농림어업의 성장률도 4.3%에 달해 예년에 비해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9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산한 지역 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전국 총생산 디플레이터와 비교할 때 충남의 디플레이터가 91, 92 및 93년도에 모두 전국 디플레이터 보다 크게 높아 충남의 물가상승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sup>6)</sup> 따라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실질 지역내총생산 상승율은 91년에 7.6%, 92년

에 10.3%, 그리고 93년에 8.3%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국 총생산상승율과의 격차도 줄어들어 명목가격으로 산출한 지역내 총생산증가율은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충남의 산업구조는 <표2>에 나타난 것처럼 93년도에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이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광공업이 23.6%, 농림어업이 22.6%,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22.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92

<표2> 충청남도 산업별 경제성장률 및 생산구조

(단위: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경제성장률(불변)	2.9	7.6	10.3	8.3
• 농림어업	-4.6	2.7	4.2	4.3
• 광공업	-13.3	7.1	11.9	10.3
(제조업)	(-12.7)	(7.5)	(12.5)	(9.7)
건설 및 전기 가스수도업	42.4	5.1	24.1	15.2
• 서비스업 및 기타 <sup>1)</sup>	5.3	13.5	7.0	6.1
생산구조(경상)				
• 농림어업	29.2	25.9	23.3	22.6
• 광공업	19.0	23.0	23.3	23.6
(제조업)	(18.1)	(22.2)	(22.5)	(22.8)
• 건설 및 전기 가스수도업	18.5	18.5	21.7	22.3
• 서비스업 및 기타	33.3	32.6	31.7	31.5

주: 1)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 및 민간 비영리서비스 생산자, 금융취속 서비스료

자료: 통계청, 1993년 지역내 총생산 (15개 시도별), 1995. 8.

6) 금액표시의 시계열지표에는 가격상승에 의한 명목상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계열지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격상승분을 제거하여 실질금액으로 계산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명목금액을 실질금액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디플레이터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국민총생산 디플레이터인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GNP 디플레이터 = 명목GNP / 실질GNP.

년도에 비해 농림어업이 0.7%포인트,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이 0.3%포인트 감소한 반면 광공업은 0.3%포인트,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본 산업별 성장률은 93년도에 농림어업이 4.3%, 광공업이 10.3%,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15.2%, 서비스업 및 기타가 6.1%를 기록해 92년도, 93년도에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업의 성장률이 특히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한 충남의 산업구조는 93년도에 농림어업이 전국평균 구성비인 7.1%보다 훨씬 높은 22.6%를 구성하고 있고, 광공업은 30.2%보다 낮은 23.6%를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이 62.7%보다 낮은 53.8%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산업구조는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파급효과가 크고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고무적인 현상은 <표2>에서 보듯이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소폭이나마 제조업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남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충남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 3. 충남의 제조업 및 중소기업 현황 및 구조

그 동안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양적, 질적 발전

을 이룩하였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은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기술, 인력 및 판매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경제환경 아래서는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신속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외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대두 시키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임금의 상승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저부가가치의 경공업 중심구조로 부터 고부가가치의 중화학공업 중심구조로 변화하지 않으면 개방화된 경제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저부가가치의 경공업이 주류를 이루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대기업과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 육성은 산업구조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그리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응해 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인해 지방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 위주의 수도권 및 국토의 동남권에 치우친 경제

개발로 야기된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시정하지 않고는 국가전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경제의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방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충남의 경우는 그 동안의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점차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변화는 서해안개발 및 중국의 개방으로 인한 입지적인 유리함을 찾는 대기업 중심의 석유화학 중심 투자와 수도권으로 부터 이전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남 경제환경의 변화를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충남이전 대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앞으로의 경쟁에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과 하청계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기업의 경우 비수급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기술혁신투자가 높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계열화가 모기업으로 부터 정보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용절감 노력, 생산과정의 발전관리 능력, 제품사양의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대한 요구를 모기업으로 부터 끊임 없이 받

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갖는 긍정적인 요소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와 서해안개발과 공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충남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충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충남 제조업의 일반현황을 분석해 보면, 서해안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9년에서 92년까지 3년 동안 제조업체수는 전국평균 증가율 4.4%를 훨씬 웃도는 12.4%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전국 증가율이 -3.3%인 반면 충남은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중 부가가치액은 대산 석유화학단지내 대기업들의 가동으로 연평균 44.1% 증가해 전국 평균증가율(20.4%)을 두 배이상 상회하였다. 그러나 89-92년 동안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평균 증가율(24.5%)을 상회하는 29.9%의 상승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수치 면에서는 92년에 33,577천원을 기록해 같은 해 전국 1인당 부가가치 34,275천원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 충남 제조업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업체수 면에서는 경공업의 비중이 64.3%(1,346개)로 전국평균 53.1% 보다 크게 높다. 업종별 분포도 음식료품이 16.4%(전국 6.8%), 섬유제품 13.6%(전국 10.9%), 비금속광물 19.9%(전국 5.9%)이 전국평균 보다 크게 높아 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의 경공업 중심구조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중화학업종 가운데 석유정제 및 화학물 및 화학업종이 전국평균 보다 높은 것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입주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업원수 기준으로 업종별 현황을 분석해 보

면, 경공업 종사자가 전체의 55.1%인 49,179명으로 전국기준 46.7%에 비해 높고 업종별로는 섬유제품(13.7%), 비금속광물(14.7%), 음식료품(12.6%)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수 기준으로 볼 때도 충남의 제조업이 경공업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충남은 경공업 42.6%, 중화학공업 57.4%로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며, 업종별로는 경공업은 음식료품(17.5%), 비금속광물(9.1%)이, 중화학공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17.7%), 석유정제(9.4%), 영상음향기기(8.0%)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산 석유화학단지내 3개업체(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와 선경화학(성거), 삼성전자(아산)등 5개 중화학공업 대기업의 생산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면에서는 충남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가 2조 9,550억원으로 경공업이 44.4%, 중화학공업이 51.5%를 차지해 생산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경공업의 비중이 전국평균(38.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충남이 33.6백만원으로 전국평균(34.3백만원)을 하회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43.6백만원을 기록한 음식료품이 높았고 평균적으로는 경공업의 경우 27.1백만원으로 전국 평균(27.9백만원)을 약간 하회하고 있고, 중화학공업의 경우는 41.6백만원으로 전국평균(39.8)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석유정제, 사무기기, 화합물, 화학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1인당 부가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제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사업체수에서는 20인 미만의 소기업은 55.2%로 전국평균(65%) 보다 낮고,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업은 43%로 전국평균(33.6%) 보다 높고, 대기업은 1.8%로 전국평균(1.4%) 보다 높았다.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중기업의 비중은 전국평균 보다 높았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20인 미만 소기업이 19.5백만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업이 33.5백만원, 300인 이상 대기업이 42.3백만원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는 전국평균의 소기업(16.9백만원), 중기업(29.5백만원) 그리고 대기업(48.4백만원)보다 충남의 소기업과 중기업은 전국평균보다 높았고 대기업은 전국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충남의 제조업 및 중소기업은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비중이 높고 점진적으로 중화학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비중 증가는 서해안개발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서북부 임해공업단지로 이전하는 석유정제, 화학업종,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영상음향기기 제조의 대기업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충남이전 대기업과 지방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4. 충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분석 및 문제점



앞의 분석에 나타나듯이 충남경제는 농림어업으로 부터 광공업 내지는 제3차 산업으로 산업의 비중이 옮겨 가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 있다. 그러나 단순한 대기업의 공장이전과 신증설 만으로는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룩될 수는 없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충남의 서해안과 북부권에 신설 및 이전하는 대기업과 상호 보완되어 분업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하청계열화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지방 자치단체는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하청계열화의 의미와 대기업과의 상호 보완성을 통한 하청계열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분석하고 충남의 하청계열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구조상 많은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분업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기업은 어떤 부품 또는 공정을 자체생산하고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산업에서는 수 만 가지의 부품을 사용하는데 주요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구매하여 조립 생산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기업은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해 부품을 자체생산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기도 한다. 또는 그 중간의 형태로 도급거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관계는 어떠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지 살펴보자.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다. 기업은 시장에서 부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데 따르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up>7)</sup>을 고려해 부품을 자체생산 할 것인지 시장에서 구매할 것인지 결정한다. 부품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든가, 계약을 이행시키기 어렵다든가, 부품이 전문화 된 것이든가 등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게 되면 기업은 부품생산을 내부화 시켜 수직적 결합을 단행할 것이다. 즉, 수직적 결합을 하는 데 드는 내부화 비용과 외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의 비교가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비교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업은 자체생산에 수반되는 비용이 구매에 따르는 비용보다 높아지는 공정까지 수직적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결합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규모의 경제는 무한정하게 발생하지 않고 장기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점에서 최소효율규모(least efficient scale)를 나타내게 된다. 적정규모를 넘어서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 단위 당 평균생산비용이 증가해 생산비용의 극소화를 달성하지 못하여

7)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의 접근방법 가운데 개인과 기업의 이윤추구와 효용극대화 목표에 기초한 가격이론적 접근을 하는 Chicago-UCLA 학파에서는 시장의 구조와 기업의 행동을 거래비용의 입장에서 분석한다(Carlton & Perloff,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ition, Harper Collins, 1994). 이 접근에서는 거래비용은 타인 또는 타기업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시키는 것과 같은 단순한 상품가격 이외의 추가비용을 가르킨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거래비용 이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Ronald H. Coase(1937)는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데에는 비용을 수반하고 이러한 비용이 시장구조를 결정짓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효율적 생산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또한 공장  
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영상의 불경제, 판매,  
자본조달, 인력관리 등 제반경영에서 X-  
Inefficiency<sup>8)</sup>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구매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완전 자체생산으로 생산의 완전한 내부화에 따  
르는 제반 불경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구조가 필요하게 되어 제3의 기업간 수직적 결  
합관계 즉, 준결합(quasi-integration)인 도급거래  
관계<sup>9)</sup>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간 분업의 효율성에 의한 하청계열화의  
경제적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하청계열화  
는 효율적인 생산단위 및 경영단위에 입각한 사  
회적 분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평가  
가 높이 평가된다. 둘째, 전문분야의 특화 촉진으  
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문분야에 특화  
함으로써 기술력과 생산능력의 효율적인 축적으  
로 전문화가 촉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다. 셋째, 기술수준을 발전시킨다. 전문화된 기술  
의 축적으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다. 넷째, 조  
직 운영의 합리화로 경영의 X-Inefficiency를 제  
거할 수 있다. 다섯째, 수요가 다양화된 현대의  
시장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다. 여  
섯째, 외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해 환

경변화로 부터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일곱째,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기업이 수급기업의  
기존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  
체적으로도 가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  
덟째, 산업구조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공업구조의  
고도화 내지는 생산효율의 향상은 생산의 분업  
화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상호보완관계 형성으로 합리화된 산업구조  
를 구축할 수 있고, 급변하는 외부 경제환경에  
적합한 산업구조로의 조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산업구조 조정의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관계는 위와 같은 많은  
긍정적인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과  
더불어 하청계열화 구조는 양적 팽창과 함께 질  
적인 개선도 하게 된다. 일본의 경험을 분석해  
보면 하청계열화는 제1단계의 유동적 거래단계,  
제2단계의 종속적 거래단계, 제3단계의 협조적  
거래단계, 그리고 제4단계의 자립적 거래단계를  
거치게 된다.

초기단계에서는 수급기업이 모기업의 기술력,  
자금력 등 경영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모기  
업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지나치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모기업  
의 지원과 장기간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수

8) X-Inefficiency는 일반적으로 기업조직의 비효율적 관리와 경영자의 이윤극대화 추구에 대한 동기의 부족에서 발생한다.

9)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서는 도급과 계열화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계열화의 개념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계열화라 함은 제조업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부속품 및 원료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분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급기업은 고도의 기술력 등 경영자원을 축적하여 모기업에 대한 강한 교섭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고 양자간의 관계는 변하여 수급기업은 점차 자립적 거래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완관계에서는 하도급거래가 가져다 주는 장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은 도급거래의 제2단계 내지는 제3단계의 초기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제3단계와 제

4단계의 혼합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농림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기업의 공장 이전 및 신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충남의 하청계열화 실태를 분석해 충남경제의 활성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를 통해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충남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실태의 유형은 아래 <표3>에 나타나 있다. 충남의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하청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기업의

<표3> 충남 중소기업의 하청거래유형, 도급거래단계, 거래 모기업수 및 규모, 제품형태 (단위:개,%)

충남 중소기업 하청거래유형		모집단 사업체수		하청을 주기만 한다		하청을 받기만 한다		하청을 주기도 받기도 한다		하청 거래관계가 없다	
제 조 업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2,039	73,364	3.5	7.6	33.6	35.5	5.1	22.3	57.8	34.6	

도급거래단계		사업체수		1차 도급기업		2차 도급기업		3차 도급기업		4차 도급기업	
제 조 업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783	42,069	84.3	70.5	14.3	26.2	1.4	2.8	-	0.5	

모기업수 및 규모			평균거래모기업수		거래모기업의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양자	
제 조 업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5.9	9.0	58.5	54.4	31.8	21.2	9.7	24.4

납품 제품형태		사업체수		부품(중간재포함) 형태				최종완제품형태	
				단일부품(Parts)		단위부품(Units)			
제 조 업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783	42,069	16.2	34.2	25.9	27.7	57.9	38.1

자료 : 상공자원부/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 1993.

비율은 57.8%로 전국평균 34.6% 보다 훨씬 높아, 충남의 중소기업이 하청계열화 관계가 전혀 없는 도급거래의 제1단계 이전 및 제1단계, 그리고 제2단계의 초기과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충남에 이렇다할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수의 업종에서는 하청을 주기만 하는 기업의 비율과 하청을 주기도 받기도 하는 기업이 전혀 없어 기술력과 자금력등이 강한 모기업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하청계열화 실태는 양적인 면에서 그 발전단계의 초기에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수급기업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3〉에 나타난 충남 중소기업의 도급거래 관계는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1차도급 관계만을 형성하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음식료품,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 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그리고 가구 및 기타 부문은 100% 1차 도급 거래관계만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하청계열화가 진전되어 수급기업의 기술력이 축적되고 경영능력과 시장력이 향상하면 할수록 도급시스템의 구성이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도급으로 이행이 일어나서 종방향으로 층이 두터워 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하청분업구조의 고층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볼 때 1차 도급거래가 전국의

70.5% 보다도 높은 84.3%를 나타내고 있는 충남의 경우는 도급거래단계가 초기 일 뿐만 아니라 수급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대단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수 및 규모별 구성비는 〈표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충남 중소기업의 평균거래 모기업수는 전국평균 9개 보다 적은 5.9개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제품(15.1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국 평균 보다 낮은 거래 모기업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충남 수급기업의 하도급 거래가 1차도급을 주로하고 있고, 전문기술을 축적하지 못하여 거래처가 다각화 되지 못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기술이 발달하고 수급기업의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피라미드식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다거래 모기업 수급기업으로 층이 두터워져 왔음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모기업의 기업규모별 분석은 〈표3〉에서 보는 것처럼 모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58.5%로 전국 평균(54.4%) 보다 약간 높고, 모기업이 대기업인 경우는 전국 평균 21.2% 보다 높은 31.8%이다. 그리고 모기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자인 경우는 전국 평균 24.4% 보다 훨씬 낮은 9.7%를 보이고 있다.

수급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제품의 납품형태별 분석을 보면 〈표3〉과 같다. 납품제품의 완제품 비중이 전국평균 38.1%보다 훨씬 높은 57.9%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단일부품의 경우는 그 비중이 전국평균 34.2%의 절반 이하인 16.2%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 역시 수급기업이 독

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의 전문화를 이룩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대기업이 수급기업의 노동력등을 활용하기 위한 단순하청의 결과라고 분석된다. 완제품 형태의 모기업에 대한 납품은 전국평균이 일본보다 높은 것이 우리나라 도급거래의 특징인데 전국평균보다 완제품 납품 비율이 높은 충남의 실태는 충남 도급거래의 질적인 면이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충남의 수급기업에 대한 거래 모기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4>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기업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고, 36.0%는 원자재공급을, 24.4%는 경영지도를 그리고 26.1%는 제품설계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본참여 및 자금지원등 금융참여를 받고 있는 수급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섬유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래일러 그리고 가구 및 기타 업종

에서는 기술지도 및 원자재공급 이외에는 이렇다할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급기업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 및 시설제공 등 모기업의 비용절감 역할만을 담당하는 단순 하청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수급기업의 도급거래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는 <표4>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외형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양측의 애로사항을 시정해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효율적 방법이다.

충남의 수급기업의 애로사항은 저렴한 납품단가가 74.7%, 대금결제기일 장기화가 62.9%를 나타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납품단가의 형성과 대금의 현금지급등을 유도해 수급기업의 애로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 거래선 변경가능성도 15.7%로 답하고 있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약자인 중소기업이 모기업의 일방적인 피해

<표4> 충남 수급기업에 대한 거래모기업의 지원내용 및 애로사항 (복수응답) (단위:개,%)

충남의 수급기업에 대한 모기업 지원내용 (복수응답)	사업체수	기술지도	경영지도	자금지원	용자보증	원자재공급	설비대여	제품설계제공	자본참여	인력파견
충남중소제조업	541	74.5	24.4	3.3	7.6	36.0	12.6	26.1	7.9	12.6
충남 수급기업의 도급거래상 애로점 (복수응답)	사업체수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인수증 교부일장기화	저렴한 납품단가	대금결제기일 장기화	수시발주	납기단축 촉박	거래선 변경 가능성		
충남 중소기업제조업	766	12.7	0.0	74.7	62.9	56.4	54.7	15.7		

자료: 상공자원부/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1993.

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급기업은 납기단축(54.7%), 수시발주(56.4%)를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납기 및 발주의 불안정은 우리나라 수급기업의 일반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칸반(看板)방식의 도입으로 일단 위 또는 시간단위 납기지정이 전체거래의 각각 41.9%, 26.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시간단위 납기지정이 8.9%, 일단위 납기지정이 38.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납기제도의 개선으로 수급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충남 제조업의 하도급 실태분석을 통해 볼 때 양적인 면에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질적인 면에서도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급관계의 제1단계인 유동적 거래단계 내지는 제2단계의 종속적 거래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수급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확대하고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결론

앞에서 분석한 결과처럼 수치상으로 나타난 충남의 일반적인 경제상황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10,275십억원(전국대비 3.8%)으로 인구대비

구성비 4.3%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고, 1인당 생산수준의 절대액수 면에서도 5,392천원으로 전국의 1인당 생산액(6,072천원)의 88.8%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물가상승을 감안한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도 92년, 93년에 모두 전국평균 총생산 증가율(5.7%, 6.3%) 보다 높은 10.3%, 8.3%를 기록해 근년에 와서 지역내 총생산 측면에서는 많은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93년도에 22.6%로 전국평균(7.1%)보다는 크게 높지만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광공업의 비중은 소폭이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수치면에서 93년도에 광공업의 전국평균 비중 30.2%보다는 훨씬 낮은 23.6%를 기록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농림어업의 비중 축소와 광공업의 비중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 제조업의 구성 및 추이면에서는 업종의 중심이 음식료품, 섬유제품 및 비금속광물 등 경공업이 업체수 및 종업원수 기준으로 64.3%, 55.1%를 나타내 전국평균 경공업 분야 비중 53.1%, 46.7% 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충남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조정이 되어야만 시장의 개방화 및 고임금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업종 구성면에서 업체수 및 종업원 수 기준으로 경공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부문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액 및 부가가치 면에서는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2.6%, 44.4%로 중화학공업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제조업에서 종업원 수 기준으로 44.9%를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부가가치가 5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화합물, 화학, 석유정제 및 영상, 음향기기가 높은 부가가치(20.8%, 4.5%, 7.9%)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분야에서의 높은 부가가치 비중은 89년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 삼성 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선경화학 및 삼성전자 아산공장 등 대기업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대한 재투자로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산업구조가 대기업의 지방이전과 공장 신증설에 의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대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내지는 하청계열화 관계가 구축되어야 지방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부터 충남 제조업체 하도급 거래 실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하도급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57.8%를 나타내 전국 평균 34.6%보다 높아 충남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가 양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하도급

거래 단계가 1차도급(84.3%)의 비율이 전국 평균(70.5%)보다 높아 도급거래가 질적인 면에서도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도급거래의 중층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 수급기업의 평균 거래 모기업수(5.9개)로 전국 평균(9.0개)보다 적은데 이는 충남 수급기업이 판매력, 기술력 등 독자적인 자립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납품제품의 형태가 완제품 비율이 57.9%(전국 평균 38.1%)로 높아 독립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 및 부품생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면에서는 자본참여 및 자금지원 등 금융참여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수급기업의 도급거래상 애로점에서는 납품단가가 지나치게 낮고 대금결제기일의 길고 수시발주 및 납기촉박 등 납기 및 발주의 불안정을 들고 있다.

이러한 충남 수급기업의 도급거래실태를 개선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강화를 통해 충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충남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간 하도급거래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효과 및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충남 유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또한 충남 중소기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고도성장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향후 충남의 고용안정 등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수도권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저렴하고 풍부한 공장용지 및 서해안 시대의 개막으로 충남은 각종 거래 및 물류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게 좋은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금융상, 세제상의 시책을 개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유치 업종 선정에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무공해 업종으로 신중하게 선정하지 않으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선진국형 경제구조 형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 중소기업의 자립적 능력을 키우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와 도급거래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기술개발 및 도입비용의 과다로 인한 자금부족 문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조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 강화해 기술개발을 유도해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 기술의 이전과 연구인력의 교류 등 기술협력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강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기술

협력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지원강화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독자개발의 경우보다 공동개발의 경우에 많은 지원혜택을 주고 각종 제도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공정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관행 시정, 납품대금 결제기일 단축 등을 유도하고 납기 및 발주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급기업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충남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하청계열화와 공동 기술개발 등의 협력이 강화될 때 충남경제의 저변이 확대되고 충남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가 동시에 달성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룩될 수 있으므로 자치시대 지방정부는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문수외,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조정과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개선방향, KDI, 1990. 12.
2. 박종찬, “충남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 방안” 지역개발연구논총, 공주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 창간호, 1993.
3. 백낙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4.4.
4. 상공자원부/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 1993.
5. 이경의, “산업구조의 개선과 하청,계열화(상),” 기은조사월보 제26권 제7호, 중소기업 은행, 1988.7.
6. 이경의, “산업구조의 개선과 하청,계열화(하),” 기은조사월보 제26권 제8호, 중소기업 은행, 1988.8.
7. 임정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 시책의 개선 방안,” 한국의 중소기업, 기업은행조사부, pp.7-76, 1993.
8.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연감, 각년도.
9.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대전·충남지회, 대전, 충남 중소기업 현황, 1994.
10. 통상산업부, 9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1995.3.
11. 통상산업부, 95년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1995.3.
12. 한국은행 대전지점, 대전·충남지역의 경제구조와 발전방향, 1994.9.
13. ———, 대전·충남지역 중소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방안, 1994.12.
14. ———,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각년도.
15. ———, 금리자유화 이후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구조변화, 1995.6.
16. ———, 대전·충남지역 공단업체 및 수출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1995.5.